

배포 일시	2023. 1. 12.(목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관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건설산업과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보도일시	2023년 1월 1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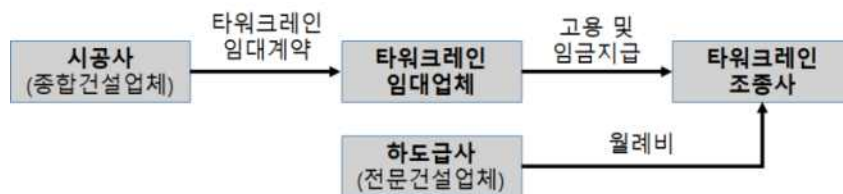
##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·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- 타워크레인 월레비 강요·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·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민·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월레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

#### ◆ 타워크레인 월레비 개요

- ▶ 타워크레인 월레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(전문건설업체)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**부정 금품**을 의미
- ▶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, 시공사들(통상 각 하도급사)로부터 별도 월레비를 추가로 요구



-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,

-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론했다.
- 이러한 구조 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'월레비' 명목으로 월 600~1,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,
  -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.
-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,
  -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·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## ②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

- 한편,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하여,
  -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,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,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.

### ◆ 레미콘 부당행위 관련 주요 사례

- ▶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, 이를 거부할 시 레미콘 운송을 중단

\* 사례 :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○○노총 소속 건설 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,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(22.12.16~23.1.8)

- ▶ 해당지역 레미콘 운송업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 강요(1~2천만원 수준)

-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

-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.
- 아울러,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
- 한편,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.
- 특히, 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'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'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.
- 또한,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,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